

2018, 국회 8급(해설 : 이명훈)

1.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 ②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 ③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 ④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 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답) ① 현재 국세는 14개이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핵심체크>> 국세(14개)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거래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화물이 국경을 통과하면 발생하는 세		

2. 다음 중 <보기>의 가상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민원 관련 허가를 미루려는 A국장의 기이한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A국장은 자기 손으로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보고도 과장을 시켜서 하는 등 단체장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해외일정을 핑계로 아예 장기간 자리를 뜨기도 했다. A국장이 승인여부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제대로 올리지 않자 안달이 난 쪽은 다름 아닌 바로 단체장이다.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국장과 단체장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임기 말에 논란이 될 사안을 결정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자치단체의 일선행정 현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 정책의 신뢰는 저하되고, 신뢰를 잃은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 ① 업무수행지침을 규정한 공식적인 법규정만을 너무 고집하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 ②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인 권위의 계층적 구조에서 상사의 명령까지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행태를 말한다.
- ③ 관료들이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보신주의로 빠지는 행태를 말한다.
- ④ 관료제에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조직과 대상 국민에게 순응의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기관에 대한 정서적 집착과 같은 귀속주의나 기관과 자신을 하나로 보는 심리적 동일시 현상을 말한다.

(답) ③ 설문은 관료들이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보신주의로 빠지는 행태를 설명하고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443).

3.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한다.

- ① 과학적 관리론
- ② 공공선택론
- ③ 행태주의
- ④ 발전행정론
- ⑤ 현상학

(답) ② 설문은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이다.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사회과학의 분야(국가이론, 투표 규칙, 투표자의 행태, 정당정치, 관료행태, 이익집단의 연구 등)에 적용한 접근방법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122).

<<핵심체크>> 공공선택론

의의	비시장적 의사결정(국가이론, 투표 규칙, 투표자의 행태, 정당정치, 관료 행태, 이익집단의 연구 등)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정치경제학적 접근,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론적 개체주의(환원주의적 시각, 미시적 연구) • 연역적 연구
기본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의 성격 : 정부(정치인, 관료)는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보고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중시 • 인간관 : 합리적 경제인관(이기적 존재) - 정치인은 득표극대화를 위해, 관료는 예산극대화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며, 시민들은 무임승차자로 행동 • 제도적 장치(유인설계장치)의 마련 : 이기적 개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형성 중시

4. 다음 중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부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건전성의 확보
- ② 국민부담의 최소화
- ③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 ④ 예산과정에서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 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답) ⑤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우리나라 예산의 원칙으로 재정건전성의 원칙(①),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②), 재정성과의 원칙(③), 투명성과 참여의 원칙(④), 남녀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685).

<<핵심체크>>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

재정건전성의 원칙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 부담 최소화의 원칙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정성과의 원칙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
투명성과 참여성의 원칙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녀평등의 원칙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다음 <보기> 중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
 ㄴ.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ㄷ.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ㄹ.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주도한다.
 ㅁ.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답) ③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이란 집행자의 관점에서 집행현상을 설명하는 행위 중심적 접근방법을 말한다. 상향적 접근은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추며(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ㄷ). 또한 상향적 접근은 집행자의 관점에 있기 때문에 결정자인 고위직보다는 집행자인 하위직이 집행을 주도한다고 본다(ㄷ). - (하이패스 행정학 p354)

- <<오답정리>>
 ㄱ. 상향적 접근은 집행현장에서 집행관료와 정책대상집단 간의 모든 행위와 행위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점증모형의 입장을 반영한다.
 ㅁ. 하향적 접근은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그러나 상향적 접근은 환경에의 적응성, 집행자의 바람직한 행동 유발 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곤란하다.

<<핵심체크>>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선현장의 집행자를 집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로 보고, 집행자의 관점에서 집행현상을 설명하는 행위 중심적 접근 집행현장의 일선관료로부터 출발하여 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정책대상집단·관련 이익집단·지방정부기관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상부집행조직·정책의 내용 등을 연구 	
특징	연구대상	집행현장에서 집행자와 정책대상자들의 모든 행위와 행위에 대한 반응(집행과정의 인과관계 파악)
	집행과정에 대한 시각	정행일원론의 관점에서 집행의 정치적 성격(정책변동) 강조
	집행성공의 판단기준	집행자의 재량과 역량 강화를 통한 집행 문제의 해결
	정책성공을 위한 요소	집행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
	연구방법	미시적·귀납적 접근 - 집행현장에서의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서술
	주요학자	엘모어(Elmore)의 후방향적 접근, 버만(Berman)의 적응적 집행,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린드블롬(Lindblom)의 정책결정으로서의 집행, 히언(Hjern)과 헐(Hull) 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의 정책집행현장에 대한 세밀하고 정밀한 진술 및 지역 간 집행상 차이 파악 용이 집행현장에서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파악 및 여러 정책들 간의 상호관계 파악 용이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 파악 용이 집행을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유용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선관료들의 재량과 영향력을 강조하여 결정권자의 공식적 권한 무시 공식적 정책목표가 무시되므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객관적인 평가 곤란, 집행지상주의에의 도취 등의 문제 야기 대리인인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 부여로 집행자의 도덕적 해이 야기 집행현장 중심의 귀납적 연구로 일반화된 연역적 분석틀 형성 곤란 	

6.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 ③ 교육·소방·경찰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④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답) ③ 교육·소방·경찰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595).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경력직 공무원	의의	실적과 자력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직업공무원	
	종류	일반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1급에서 9급으로 구분, 다만 연구직은 연구관과 연구사, 지도직은 지도관과 지도사 2계급으로 구분되며,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없이 직무등급으로 구분됨) 일반직 공무원 확대 : 임기제공무원(기존 계약직), 전문경력관(기존 별정직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선관위상임위원(기존 별정직)도 일반직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함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경찰·소방·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포함)
특수경력직 공무원	의의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력직 외의 비직업공무원	
	종류	정무직	<p>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출직 :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국회임명 동의 :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 등 ·고도의 정책결정업무 담당 : 장·차관, 처장, 청장, 기타 차관급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경호처장, 국무조정실장 등
		별정직	<p>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 차관보, 장관 정책보좌관, 국회수석전문위원 등 ·조례 : 지방의회전문의원 등

7.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② 재의요구권
- ③ 기금의 설치·운용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⑤ 청원의 수리와 처리

(답) ②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833).

<<핵심체크>>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의결권(필요적 의결사항 - 열거주의)	①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② 예산의 심의·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 기금의 설치·운용,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⑪ 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서 감사를 실시함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의회자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는 의회규칙제정권, 의원자격심사권(의원신분사정권), 의원징계권, 의견표시권 등의 의회자율권을 지님 • 지방의회는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그 직원을 보임할 수 있음
기타	① 서류제출요구, ②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③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8.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성
- ② 정부조직의 내부성
- ③ 파생적 외부효과
- ④ 점증적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 ⑤ 비용과 편익의 괴리

(답) ④ 점증적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44).

<<핵심체크>> 정부실패

유형	내용		대응방안
사적목표의 설정(내부성)	의의	관료들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목표(공익)와 조직내부의 목표가 괴리를 빚는 현상	• 민영화
	양태	① 관청형성모형(던리비), ② 파킨슨의 법칙, ③예산극대화 모형(니스카넨), ④ 정보의 통제, ⑤ 최신기술에 집착, ⑥ 법규와 절차 등에의 집착, ⑦ 규제기관과 피규제 산업 간에 유착관계 등	
파생적 외부효과	의의	정부개입이 초래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	• 정부보조 삭감 • 규제완화
	원인	①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 할인율, ②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미래예측의 곤란성 등	
X-비효율성 (공급비용 체증)	의의	독점으로 인한 관료들의 관리상·기술상·행태상의 비효율성	• 민영화 • 정부보조 삭감 • 규제완화
	예	① 무사안일·복지부동, ② 도덕적 해이·소극적 업무행태·최신기술에의 부적응 등	
권력의 편재	정부가 규제권한 등을 통해 권력과 특혜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배의 불형평		• 민영화 • 규제완화
비용과 수익의 절연	의의	편익집단과 비용집단의 단절로 공급자인 정부는 원가개념 없이 과잉생산하고 소비자인 국민은 비용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잉 소비하는 현상	• 미시적 절연 : 소수가 관료포획 등을 통해 다수를 이용(규제정책) • 거시적 절연 : 국민 다수가 투표권을 통해 소수를 이용(재분배정책)
	유형		

9. 다음 중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하는 상황
- ②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
- ③ 기업체에게 상품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
- ④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설정하다 보면 실제로는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
- ⑤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답) ② 규제피라미드란 규제가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라고도 한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모두 규제의 역설의 예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248).

<<핵심체크>> 규제의 효과

법규주의	피규제자의 다양성, 규제집행 현장의 불확실성, 규제 상황의 동태성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법령대로만 적용하려는 현상	
규제의 피라미드	규제가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규제의 재분배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는 보이지 않는 세금 : 조세처럼 국민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수단 • 규제와 교차보조 : 가격규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 수행 • 규제와 지대 : 지대(규제)를 얻기 위한 각종 로비활동 등으로 사회적 낭비 초래 • 규제와 포획 : 규제기관이 기업의 포로가 되어 소비자의 희생으로 기업의 이익증진에 기여 	
규제의 역할	의의	정부에 의해 형성된 규제가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규제의 목적과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발생하는 현상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된다. •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한다. •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는 기술 개발을 지연시킨다. •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해가 된다. • 기업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든다.

10. 다음 중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 ① 행태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 ② 제도주의에서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한다고 본다.
- ③ 행태주의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중시한다.
- ④ 각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으려는 것은 제도주의 접근의 한 방식이다.
- ⑤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와 제도주의는 같다.

(답) ④ 각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으려는 것은 제도주의 접근의 한 방식(역사적 신제도주의)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132).

<p><<오답정리>></p> <p>①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만을 연구하므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p> <p>② 행태주의에서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한다고 본다.</p> <p>③ 행태주의는 인간행태의 규칙성·상관성·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고려하지 못한다.</p> <p>⑤ 행태주의는 행정현상에서 왜(why)의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며,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고려하지 못한다. 반면, 제도주의는 제도를 통해 개인의 행위 및 사회현상을 설명(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하거나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합리선택적 제도주의)한다.</p>
--

<<핵심체크>> 행태주의와 신제도주의 비교

구 분	행태론적 접근방법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제도의 개념	제도는 개인행태의 단순한 집합	제도는 개인행태의 단순한 합 이상
제도와 행태 관계	제도의 독립변수성 부인 : 제도는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주지 못함	제도의 독립변수성 강조 : 집합적 선호 등의 제도가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
연구방법	정태적 연구	동태적 연구
거시와 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주의(개체주의) • 일반법칙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주의와 미시주의의 절충 • 중범위 이론
공통점	제한된 합리성 인정, 공식적 제도에 대한 반발	

11.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윌슨(Wilson)이 제시한 규제정치이론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① 대중정치
- ② 기업가정치
- ③ 이익집단정치
- ④ 고객정치
- ⑤ 소비자정치

(답) ① 차량 10부제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대중정치상황의 예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247).

<<핵심체크>>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

구 분	대중정치상황	이익집단정치상황	기업가정치상황	고객정치상황
의 의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다수에게 미치지 만, 각각의 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는 작은 상황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동질적인 특정소수집단에 국한되고, 그 크기도 매우 큰 상황	규제의 비용은 동질적인 특정소수집단에게 집중되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큰 반면, 편익은 이질적인 일반대중에게 분산되어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	규제의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편익은 동질적인 특정소수집단에게 집중되어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큰 상황
비 용	넓게 분산	좁게 집중	좁게 집중	넓게 분산
편 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넓게 분산	좁게 집중
정치적 활동	비용부담자와 혜택자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	비용부담자와 혜택자 모두 강력한 집단행동	비용부담자는 집단행동, 혜택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	비용부담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 혜택자는 집단행동
NGO의 역할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여론화하려는 역할	NGO 역할이 위축됨	규제형성을 위한 여론형성 등 창도가로서 역할	규제를 형성하려는 특정이 이익집단의 감시자로서 역할
정부의 모습	정책을 실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해짐	정부의 역할이 위축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규제기관에 포획되어 느슨한 집행이 이루어짐	특정이 이익집단의 로비로 인한 포획 현상이 나타남
예	독과점 규제, 방송·통신의 윤리 규제, 종교활동 규제, 각종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의약분업과 관련된 규제, 노사관계와 관련된 규제	환경규제, 소방규제, 작업안전규제, 식품안전규제, 원자력안전규제 등 사회적 규제	진입규제, 가격규제, 수입규제, 농산물최저가격제 등 경제적 규제

12. 다음 중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위해제 :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용행위
- ② 직권면직 :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면해주되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는 임용행위
- ③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임용행위
- ④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는 임용행위
- ⑤ 정직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보수를 전액 감하는 임용행위

(답) ⑤ 정직이란 중징계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임용행위를 말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663).

<<오답정리>>

- ① 직위해제란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 ② 직권면직이란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 ③ 해임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 ④ 파면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핵심체크>> 공무원의 징계

경징계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징계절차에 의하고 인사기록에 남음 (6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1/3을 감함(12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중징계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함(18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3급으로,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함(전문경력관과 임기제 공무원은 적용하지 않음)
	해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3년 이내에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퇴직급에 영향이 없음(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8 ~ 1/4를 감함)
	파면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 이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 ~ 1/2을 감함(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를 감함)
징계기구	중앙징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위원장 : 인사혁신처장) 심의·의결 대상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보통징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설치 심의·의결 대상 : 6급 이하 공무원
징계시효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13. 다음 중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시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론은?

- ①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 ②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
- ③ 엘더퍼(Alderfer)의 ERG(존재, 관계, 성장)이론
- ④ 머슬로(Maslow)의 욕구 5단계론
- ⑤ 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

(답) ①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이란 사람들은 자신의 산출/투입과 타인(준거인물)의 산출/투입을 비교하고 자신에 대한 처우가 불공정하다고 지각하게 되면 공정성을 얻기 위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산출/투입의 비율이 크다고 지각(과다보상)하는 경우 투입(노력) 증대 등의 행태를 보인다. 따라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시 성과급 비중을 설정할 때 불공정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523).

<<핵심체크>>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산출/투입과 타인(준거인물)의 산출/투입을 비교하고 자신에 대한 처우가 불공정하다고 지각하게 되면 공정성을 얻기 위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는 이론
공정성에 대한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거인과 산출/투입의 비율이 일치한 경우 : 동기유발 없음 • 자신의 산출/투입의 비율이 작은 경우(과소보상) : 편익 증대 요구, 투입 감소, 산출의 왜곡, 준거인물 변경, 본인의 지각 변경, 조직에서의 이탈 등 • 자신의 산출/투입의 비율이 큰 경우(과다보상) : 편익 감소 요청, 투입 증대, 준거인물 변경, 본인의 지각 변경 등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의 소환청구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 ②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주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 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답) ④ 주환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890).

<<핵심체크>> 주민소환제

의의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기타 주요 공직자의 해직 등을 임기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목적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능력, 공약불이행, 독단이나 횡포 등 다양한 이유로부터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 주민은 그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청구권자 및 청구	선거권이 있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	
투표대상	당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단, 비례대표의회의원은 제외), 교육감	
남용방지	• 임기 개시 1년 이내, 임기만료일 1년 미만, 해당 공직자의 주민소환투표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없음 •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특정지역에 의한 주민소환 남용방지 규정을 두고 있음	
권한정지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확정 및 효력	•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 하지 아니함 •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함	
불복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으며,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15. 다음 중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명시이월
- ② 예비비 사용
- ③ 예산의 이용
- ④ 계속비
- ⑤ 예산의 이체

(답) ⑤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변화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기관 간 예산을 변동시키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이체는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는다(하이패스 행정학 p756).

<<핵심체크>> 예산제도와 국회의 의결

사전의결 필요	사전의결 불필요	사후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예산 • 기금 • 계속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이월 • 이용 • 예비비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예산 • 긴급재정경제명령 • 예비비의 지출 • 사고이월 • 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결산 • 계속비 결산 • 예비비의 지출

16. 다음 중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적 관점
- ② 프로그램적 관점
- ③ 고객 관점
-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
- ⑤ 학습과 성장 관점

(답) ② 균형성과평가표(BSC)는 조직의 비전 및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는 네 관점의 핵심성공요소를 측정 가능한 핵심지표(KPI)로 구체화하여 평가하는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 이상의 관리철학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505).

<<핵심체크>>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의의	조직의 비전 및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성장과 학습이라는 네 관점의 핵심 성공요소를 측정 가능한 핵심지표(KPI)로 구체화하여 평가하는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 이상의 관리철학(칼프란과 노튼)	
측정지표	재무관점(과거시각, 후행지표)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시장점유율, 원가절감율 등
	고객관점(외부시각)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 증감 등
	내부 프로세스 관점(내부시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 적법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공개 등
	학습과 성장 관점(미래시각, 선행지표)	학습 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 만족도 등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측정시스템 : 조직원의 성과평가를 위한 장치 전략관리시스템 : 조직의 비전과 미션, 전략목표, 성과지표, 실행계획으로 케스케이딩하여 완성되는 하향적 전략관리시스템 의사소통도구 :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성과지표로 전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 관점 :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모든 성과평가의 지침이 되는 관리방식 체제적 관점 : 조직의 비전과 임무를 하위체제인 전략으로 연계하고, 전략을 하위체제인 성과지표로 연계하는 위계적(계층적) 체제 상호균형 : 재무와 비재무, 외부와 내부, 선행과 후행, 단기와 장기 간에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기법 인과관계 : BSC의 성과지표들은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동인으로부터 재무 관점의 향상된 재무성과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로 연계 	
정부에 적용	BSC의 원형은 재무관점을 인과적 배열의 최상위에 두지만, 공공영역에서는 재무관점은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보고 사명달성의 성과 또는 납세자 관점이나 고객 관점을 인과적 배열의 최상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	

17. 다음 중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 ② 직급 :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 ③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 ④ 직류 :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
 - ⑤ 직군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 (답) ⑤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행정, 기술 등)을 말한다.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은 등급(계급)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583).

<<핵심체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실장, 국장, 과장 등) 직위의 수와 직원의 수 일치
직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급의 수는 직위의 수보다 적음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행정, 기술 등)
직렬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행정, 세무, 교정 등)
직류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등)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우리나라 실정법상 계급 -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등).

18.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인간관계론에서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 능력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 ㄴ.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 ㄷ. 체제론은 비계서적 관점을 중시한다.
- ㄹ. 발전행정론은 정치, 사회, 경제의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답) ① 인간관계론에서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 능력보다 사회적 규범(집단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ㄱ).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연구, 동작연구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분업화, 표준화)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ㄴ). - (하이패스 행정학 p73 ~ 78)

- <<오답정리>>
- ㄷ. 체제론에 의하면 하나의 체제는 여러 하위체제로 분화되고, 동시에 상위체제로 통합된다고 보므로 계서제적 관점을 중시한다.
 - ㄹ. 발전행정론은 불균형발전전략을 중시하므로 정치, 사회, 경제의 불균형 성장을 야기하였다.

19. 다음 중 베버(Weber)가 제시한 이념적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의 충원 및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② 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제에 따른다.
- ③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조직이 운영된다.
- ④ 민원인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업무처리시 관료와 민원인과의 긴밀한 감정교류가 중시된다.
- ⑤ 조직 내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 ④ 베버(Weber)의 이념적 관료제에서 관료는 증오·감정·열정의 관계를 떠나 법규에 의한 비개인성·물인간성·비정의성·비사인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처리시 관료와 민원인 간에 몰감정적 업무처리가 중시된다(하이패스 행정학 p441).

<<핵심체크>> 베버(Weber)의 이념적 관료제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적 개념(Weber) : 관료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으로 계층제적 구조를 지니고 대량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분업화된 조직구조 기능적 개념(Laski) :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관료집단이 정치권력의 장악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구조 	
성격	이념형	고도의 사유 과정을 통해 이상적인 조직의 조건으로 제시된 모형
	보편성	공·사행정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형태
	합리성	인간본질의 합리적 측면에 착안한 합리적·공식적 모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서제적 구조 : 관료제는 상하 간 계층을 이루며, 명령·복종관계가 확립된 구조 업무영역의 전문성 : 각 직무는 다른 직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직무영역을 형성 법규에 의한 지배 : 관료는 법규가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 행사 문서주의 : 관료의 모든 업무는 문서에 의해 행해짐 물주관적 대인관계 : 관료는 중요·감정·열정의 관계를 떠나 법규에 의한 비개인성·물인간성·비정의성·비사인성을 유지해야 함 공·사 구분 : 사적 감정을 업무수행에 연결시키지 않음 의사결정 권한의 집중 : 단일의 권력중추에 의한 지배를 전제로 함 관료제에서 관료 : 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 전문지식과 기술에 의한 총원과 승진, 전임직(전 노동력 요구), 신분보장 및 고정된 보수와 연금 수령 등 	

20. 다음 중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숙효과 : 정책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 ② 회귀인공요소 : 정책대상의 상태가 정책의 영향력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평균값으로 되돌아가는 경향
- ③ 호손효과 :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
- ④ 혼란변수 : 정책 이외에 제3의 변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책의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
- ⑤ 허위변수 : 정책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나 마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변수

(답) ③ 호손효과란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심리적 긴장감으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일반화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는 크리밍 효과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376).

<<핵심체크>>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과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

내 적 타 당 성 저 해 요 인	선발요소(선정요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개인들을 선발하여 할당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편견(외재적 요소)
	역사적 요소(사건효과)	실험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쳐 나타날 수 있는 편견
	성숙효과(성장효과)	평가에 동원된 집단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편견
	상실요소(이탈효과)	실험대상자들이 연구기간 동안에 이사·전보 등으로 이탈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편견
	회귀인공요소(통계적 회귀)	실험 직전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평소와는 달리 유별나게 좋거나 나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선발되는 경우 이들이 실험 진행 동안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경우 발생하는 편견
	측정도구의 변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 전과 집행 후에 측정하는 절차나 측정도구의 변화로 발생하는 편견
	측정요소(실험효과)	실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실험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측정이 실험실시 이후 실험집단의 측정점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편견
	오염효과(모방효과)	통제집단이 실험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편견
	기타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선정과 역사적 사건의 상호작용, 처지와 상실의 상호작용 등
외 적 타 당 성 저 해 요 인	호오돈 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실험집단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심리적 긴장감으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일반화의 어려움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에 어떤 편견이 개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집단이 실험 조작을 작용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로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 전 측정 받은 경험과 피조사자의 실험조작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
	표본(표본추출)의 비대표성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선정된 실험집단(표본)이 사회적 대표성이 없는 경우 일반화의 어려움
	크리밍효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을 실험집단에 포함시켜 실험을 실시할 경우 일반화의 어려움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동일 집단에 여러 번 실험적 처리를 한 경우 실험조작에 익숙해짐으로 나타나는 효과로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	

21.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 ② 민간-공공부문 간 파트너십 강조
- ③ 규제완화
- ④ 인사관리의 공공책임성 중시
- ⑤ 정치적 통제 강조

(답) ③ 탈신공공관리론이란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정치·행정체제의 통제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재집권화·재규제·구조 통합 등을 주창하는 개혁의 흐름을 말한다. 따라서 탈신공공관리론은 규제완화를 비판하고 재규제를 강조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108).

<<핵심체크>> 탈신공공관리론

의의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정치·행정체제의 통제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재 집권화·재규제·구조 통합 등을 주창하는 개혁의 흐름(신공공관리의 대체가 아닌 조정)
내용	① 민주성·형평성 등 전통적 행정가치 고려, ②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재집권화·재규제 및 조정 증대), ③ 민영화·민간위탁의 신중한 접근, ④ 총체적[합체된] 정부의 주도(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④ 역할 모호성의 제거 및 명확한 역할 관계의 안출, ⑤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⑥ 자율성 과 책임성의 증대, ⑦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 ⑧ 환경적·역사적·문화적 요소에의 유의 등

22.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
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국가재정 운용계획
- ②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③ 예산안편성지침
- ④ 총사업비 관리지침
- ⑤ 예산요구서

(답)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
산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750).

<<핵심체크>> 예산의 편성 과정

의의	행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계획하고 예정하는 과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장관에게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 계획서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정부는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전문가 공개토론회를 거쳐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 기재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중앙관서의 지출한도 포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 고(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 예산요구서의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한도와 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 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매년 5월 31일까지) • 예산안의 사정(예산협의) : 기재부가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를 분석·검토 • 예산안의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 • 예산안의 국회 제출 :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까지).
편성형식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명시이월비,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주요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상 독립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감사원의 예산편성 도 행정부가 담당 •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야 하며, 독립기관과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해야 함

23.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수행 동기 유발
- ②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③ 자기역량 강화
- ④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 측정
- ⑤ 평가의 수용성 확보 가능

(답) ④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 측정은 다면평가제가 아니라 역량평가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639).

<<핵심체크>> 다면평가제

의의	조직원을 평가할 때 상사에 의한 일방향적 평가가 아닌 다양한 수준과 측면에서 상사·동료·부하·고객 등 다양한 평가자가 평가하는 포괄적인 평가체제(360° 피드백)
등장 배경	① 관리범위의 확대, ② 지식노동자의 출현, ③ 팀위주의 조직 지향, ④ 조직원들의 참여의식 확대, ⑤ 내·외부 고객들의 피드백 중요성 등
장점	① 종합적·객관적 평가로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승복 용이, ② 소수 편견 배제를 통한 평가의 정확성 제고, ③ 구성원의 능력발전에 대한 동기유발, ④ 조직 내·외의 커뮤니케이션 증진 및 인간관계 개선, ⑤ 현대 조직특성(팀제)과의 부합, ⑥ 충성심의 다원화, ⑦ 조직의 생산성 증대, ⑧ 참여문화의 유도 및 고객 서비스 증대, ⑨ 분권화의 촉진, ⑩ 민주적 리더십 확립
단점	① 물리적 평가 비용 증대, ② 평가자의 한계로 인한 부정확성, ③ 인기투표로의 전락 가능성(조직 내 포퓰리즘 유발), ④ 답합으로 인한 목표의 왜곡, ⑤ 평가 방향의 불안정성, ⑥ 부처별·직급별·직종별 평가의 적합성 확보 곤란, ⑦ 조직의 통제 및 조정 곤란(리더십 손상), ⑧ 피평가자의 갈등과 스트레스 증가
우리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장관은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임의사항) • 다면평가에 앞서 피평가자 본인이 업무실적기록을 제출(자기평정요소 가미) •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가능

24. 다음 중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의 개념은?

- ① 내용타당성
- ② 구성타당성
- ③ 개념타당성
- ④ 예측적 기준타당성
- ⑤ 동시적 기준타당성

(답) ① 설문은 내용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내용타당성이란 시험이 특정한 직위에 필요한 능력이나 실적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능력요소(태도, 기술 등)를 포괄적으로 측정하였는가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612).

<<핵심체크>> 시험의 타당성

기준 타당 도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이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에 관한 기준 •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기준 타당성이 높음 	
	검증 방법	예측적 타당성 검증	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 그의 채용시험성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한계 측정의 정확성은 높으나, 시험성과 근무성적 간에 시차가 존재하여 성장효과 및 오염효과 발생
		현재적 타당성 검증	의의 앞으로 사용하려고 입안한 시험을 재직 중에 있는 사람에게 실시한 다음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보는 방법 한계 신속하고 비용과 노력이 절감되나 측정의 정확성이 낮음
	내용 타당 도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이 특정한 직위에 필요한 능력이나 실적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능력요소(태도, 기술 등)를 포괄적으로 측정하였는가에 관한 기준 • 내용타당도를 확보하려면 직무분석을 통해 선행적으로 실질적 능력요소를 파악해야 함
구성 타당 도	검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에 필요한(요구되는) 능력요소와 시험의 비교 • 관련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관련 전문가들이 패널 구성 등)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이 이론적(추상적)으로 구성된 능력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에 관한 기준 • 직무내용의 능력요소를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고위직에 유용하지만, 고도의 관념적 추론 과정을 거치므로 오류 가능성이 큼 	
	검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추상적) 구성요소와 시험내용의 부합 여부 측정 • 수렴적 타당성 :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상관관계가 높을수록 타당성 높음) • 차별적 타당성 :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는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타당성 높음) 	

25.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재산·소득·권리 등의 일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진세 제도의 실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적 분양,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 ①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 ②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 ③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 ④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사회간접시설과 같이 특정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 ⑤ 법령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특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 (답) ② (재분배정책)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재산·소득·권리 등의 일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하이패스 행정학 p264).

<<오답정리>>

- ① 배분정책은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 ③ 구성정책은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 ④ 배분정책은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사회간접시설과 같이 특정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 ⑤ 규제정책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특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핵심체크>> 배분정책과 재분배정책

구분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개념	정부가 공공재원을 통해 특정 개인·조직·지역사회에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가치를 배분하는 정책	권력과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켜주는 정책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부담자 : 불특정 다수(일반국민) • 수혜자 : 불특정 다수(일반국민) •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미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부담자 : 고소득층 • 수혜자 : 저소득층 •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분리
게임의 상황	비영합게임(Non Zero-Sum game)	영합게임(Zero-Sum game)
의사결정행태	상호불간섭이나 상호수용	이데올로기상의 심각한 갈등
의사결정	구유통정치(Pork Barrel)와 통나무굴리기식 의사결정(Log-rolling)	계급대립적 성격
주요행위자	관료 또는 하위정부(다원주의적 성격)	대통령(엘리트주의적 성격)
사상	자유주의(1차적 배분)	이전주의, 계급주의(2차적 배분)
추구이념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순응도와 자율성	높음(표준운영절차 확립 용이)	낮음(표준운영절차 확립 곤란)
저항	낮음	높음
갈등	낮음	높음
특징	하나의 정책이 여러 하위단위로 세분되고 다른 단위와 독립적으로 집행 가능(세부사업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	세부사업들 간에 강한 결속력과 연계관계를 지녀 세부사업단위로 독립적인 집행 불가능
구체적인 예	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노동조합·농민·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지급, 벤처기업지원·출산장려금·지방대학육성지원·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 수출정보·농작물 작황 예보 등 정보제공, 국유지 불하, 수출특혜 금융, 주택자금 대출, 국공립학교의 교육서비스, 직업훈련사업 등	누진세제도, 통합의료보험정책, 임대주택 건설, 노령연금, 빈민층에 대한 교육취로사업(공공근로사업), 부(負)의 소득세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극빈자 보호,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